

재해보상요령

제정 2003. 10.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안전사고로 인한 외부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기정원의 상근 임직원을 말한다.
2.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임직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순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4. “산재보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기관(이하 “보험관장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자체보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에 의한 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 또는 그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차액부분에 대하여 기정원이 행하는 보상을 말한다.
6. “부득이한 사고”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사고를 말한다.
7. “합의배상”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8. “안전사고”라 함은 임직원, 기정원 장비, 물자 및 설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외부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사고를 말한다.

제3조(보상)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제2장에 정하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에 의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장에서 정하는 자체보상을 할 수 있다.

제4조(보상 및 배상 주관) 제2장의 산재보상 등, 제3장의 자체보상, 및 제5장의 배상은 기획관리본부 총무과에서 주관한다.

제2장 산재보상 등

제5조(보험의 가입) 지정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의 종류 및 범위) 산재보상의 종류·적용범위 및 기타 산재보상에 관한 사항은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보험료 납부)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되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보상금 청구) ①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관장기관에 동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산재보상중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지정원에서 급여지급일에 선불하고 보험관장기관에서 수급하여 정산한다.

③제2항에 의한 선불을 행할 때에는 수급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제3장 자체보상

제9조(자체보상의 인정 및 신청) ①자체보상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는 지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자체보상의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속부서장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고경위서(사고설명도면 또는 사진포함)
2.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
3.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내역서

4. 재산상 손해내역서(재산상 손해의 경우)

5. 소속부서장 의견서

6. 기타 업무상 재해인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보상 인정여부를 신청접수일로부터 30근무일이내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절차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체보상의 종류 및 기준) ① 자체보상이 결정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 보상을 실시한다.

1. 요양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2. 휴업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3. 장해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완치 후 장애가 남는 경우 전문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장해보상에 해당하는 보상을 실시한다.
4. 일시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시보상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고 지정원은 그 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5. 유족보상 및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시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에 해당하는 보상을 한다.
6. 정신적·물적 피해보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임직원에게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제11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임직원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산재보험법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다른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원은 보상받은 한도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4장 기정원장

제12조(기정원장) 순직 또는 기정원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임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정원장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장의신청)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정원장은 재해내용, 신청사유, 공적 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장의절차) ①장의절차는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장의절차는 유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장의비용) 기정원장에 소요되는 장의비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장의비 범위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후 잔액이 있을 시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동 범위를 초과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배 상

제16조(배상책임)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은 기정원측에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보고 및 처리)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관련부서장은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를 경유, 원장에게 보고하고 배상을 위한 교섭을 하되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안전사고인 경우는 합의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합의배상)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배상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발생경위
2. 기정원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과실내용 및 과실비율
3. 피해자의 손해내용 및 손해액(과실상계 공제후)

4. 합의 상대방 및 합의배상금
5. 제2호 내지 제4호에 대한 법률고문의 의견
6.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입증자료

②합의배상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갖추어야 한다.

1. 관련사고
2. 합의당사자
3. 합의배상금
4.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의 포기

제19조(배상기준) ①부상자 및 사망자에 대한 배상 기준은 국가배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하는 바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합의배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판례상 인정된 배상액 산정기준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결정한다.

제20조(부상자의 치료) 기정원측에 책임이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치료는 기정원이 인정하는 의료시설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치료비 지급) ①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기정원에서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치료비는 매월계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상자에 대한 입원치료는 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일시배상) 부상자가 이 요령에 따른 치료를 개시한 후 3개월경과시까지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향후치료비, 장해보상금, 휴업보상금 및 위자료 등 배상금을 지급하고 기정원은 책임을 면한다.

제24조(구상) 임직원에게 과실이 있음이 명백히 입증될 때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상 및 배상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 조치할 수 있다.

제6장 보상 및 배상심의회

제25조(구성) ①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 및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원장
2. 위원 : 위원장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실·부장
4. 간사 : 주관부서의 담당팀장

제2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2. 배상여부 및 배상금액
3. 배상후의 구상여부 및 구상금액
4. 형사피의자에 대한 보상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의견진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및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9조(성립 및 의결)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배상액에 관하여 3개이상의 의견이 분립되어 각각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가장 적은 금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많은 금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③구상액에 관하여 3개이상의 의견이 분립되어 각각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수에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적은 금액

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적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제30조(확정) ①위원회에서 보상 및 배상이 의결된 사항은 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②심의회는 심의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 원장은 당해사안을 재심의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법률고문의 자문) 위원장은 배상심의에 앞서 법적 배상여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2003. 10.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배 상 사 고 발 생 보 고

사고발생	일시			장소				
피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 . .	직업	
	가족관계			월간수입액				
피해정도								
사고내용								
사고에대한 기술적견해								
사고에대한 법률적견해								
피해자측 배상요구액								
배상협의 전망 및 대책								